

李 대통령 “당분간 국민 어려움 살피고, 민생·경제 집중”

오늘 국무회의서 국가 성장전략 논의
제조업·바이오 관련 논의도 예정
지역현안 나누는 ‘타운홀 미팅’ 재개
순방 귀국 후 강릉시 찾아 민생행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현안 중 핵심인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공개했다. 외교의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단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국가 성장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시 경포대 인근 식당을 찾아 가뭄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며 식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다.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K-제조업 대전환’ 방

안을 토의한다.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주 후반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등을 찾아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가뭄이 극심한 강원 강릉시 등 현안이 있는 강원권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강릉에서 추가 수원지로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수질 오염, 냉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강릉뿐 아니라 정선 등 주변 지역의 반발이 크다. 이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강원도, 각 기초단체 등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이슈 역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

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등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를 찾으며 귀국 후 민생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 최대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보고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같은날 오후 7시쯤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K-컬처’ 알리는 한복 vs 野, ‘입법폭주 항의’ 상복

李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

與野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예정
국정감사, 추석 이후 실시 전망
의원식, IRA법·개헌 등 협조 요청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개회식에서 각자 한복과 상복을 입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100일간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세제개편안 합의 처리 등 굵직한 안건도 많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으로 정기국회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오는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한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은 한복,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K-컬처’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식에 의원 전원 다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원식 의장도 이에 호응해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오며 마치 잔칫날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양복

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의원들은 근조 리본까지 달며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의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근조리본을 달고 참석해 있다. /뉴시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통상환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이)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신(新) 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의 바람처럼 여야가 대화를 복원하고 협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조여오는 삼특검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엉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임한다”면서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석유화학 산업 불황 극복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해야”

‘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공청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촉진, 인력 양성 대책 수립, 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안에 담긴 석유화

학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예외 조항을 두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협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광기섬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 공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SK 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